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 투쟁과 단결을 강화하자

올해 들어 한국 경제에 비상 신호가 커지고 있다. 중국 성장률 하락과 증시 급락, 미국 금리 인상, 유가 하락 등 세계경제가 흔들리면서, 지난 1월 생산·소비·투자 모두 줄었다. 수출은 역대 최장기인 1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심중팔구 올해 경제는 더한층 위기로 빠져들 것이다.

이 속에서 정부와 사용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박근혜가 집요하게 '노동개혁'을 부르짖으며, 노동자들에게 경제 위기의 고통을 떠넘기려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1월 양대지침을 발표하고, 즉시 공공부문에서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도입을 위한 공격에 착수했다. 정부 공격은 확실히 민간부문에서도 사용자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경총은 올해 임금체계 개악을 추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선·해양·철강 등 위기의 산업에선

구조조정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이미 정부·여당은 더민주당의 지원 속에서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돕는 '원샷법'(기업 활력제고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에 더해 '합법 파견'을 위한 법 개악으로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 한다.

요컨대, 심화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와 사용자들의 공격은 더 몰아칠 것이다. 오늘 금속노조 대의원대회는 바로 이런 정세 속에서 올해 투쟁 방향을 정하고 논하는 자리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의 주력부대로서 투쟁에 앞장서, 조합원들과 전체 미조직·비정규직·청년 노동자들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발레오만도 판결을 계기로 떠오른 '산별노조 위기'의 진정한 해법은 작업장 담벼락을 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넘어 산별노조답게 단결과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다.



노동 개혁 저지!

'노동개혁'도, 그에 맞선 저항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자다가도 몇 번씩 깽 통탄스러운 일... 도대체 어찌자는 겁니까?”

박근혜는 2월 24일 국민경제회의에서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의 처리 지연에 분개하며 책상을 내리쳤다. 더민주당의 필리버스터가 정부·여당에 걸림돌이었는데, 역시나 더민주당은 선거구 합의안이 완성되자 중단을 선언했다. 그리고 곧바로 민주적 권리를 가로막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됐다.

이제 정부는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거품을 물고 있다. 국회 상황이 정부의 뜻대로 돌아가지는 않고 있지만, 10일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설사 2월 국회에서 개악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정부·여당은 총선 직후 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어떻게든 19대 국회에서 관철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야가 다시금 개악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 한다

면, 금속노조는 기 결정된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즉각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김상구 위원장은 "노동약법, 가이드라인 강행 시 끝장 총파업"을 하겠다고 거듭 약속해 왔다. 그런데 1월 양대 지침 발표 직후 민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에서 금속노조의 대응은 매우 미흡했다. 실제 전면 파업을 감행할 힘과 조직이 있는 금속노조는 고작 하루 4시간 파업에 그쳤다.

일부 지역지부·지회들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이 파업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며 투쟁에 나섰다. 그런데 금속노조의 원팔·오른팔로 불리는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등 완성차지부 집행부는 자신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한 노조 중집 지침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보수 언론들은 안도감을 내비치며 현대·기아차의 파업 불참을 보도했고, 많은 조합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완성차지부 집행부의 파업 지침 위반, 행동 통일 회피는 지난해 투쟁에서 거듭 드러난 문제였다. '우리는 단협이 있으니' 하고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이라면, 이는 오산이다. 지난해 정부가 노동 개혁을 추진하는 동안, 현대·기아차 사측도 힘을 얻어 임금피크제를 강력하게 압박했다. 무엇보다 힘 있는 지부들은 수많은 비정규직·미조직 등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 악화를 막기 위해 앞장서 싸울 책무가 있다. 이를 외면한다면 고립을 면키 어렵다.

남은 '노동개혁' 4법은 단협을 직접 위협하는 강제력이 있다. 통상임금, 노동시간, 파견법 개악 등은 금속노조와 완성차지부 조합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직접 공격하는 것들이다.

올해 투쟁에서는 지난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금속노조의 올해 투쟁 계획에 제시된 것처럼,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법 개악안 상정이 확실시 되면 즉각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대의원·활동가들이 이를 구현하기 위해 기층에서 투쟁 조직에 나서야 한다.

결정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2015년 3월 3일 금속 대의원대회
"환노위에 노동법 개악안 상정, 가이드라인 공식 발표 시 총파업"

2015년 11월 30일
금속 대의원대회 김상구 위원장
"노동약법, 가이드라인 강행 시 끝장 총파업" 약속

2016년 1월 23일 민주노총,
"1월 25일(월) 정오를 기점으로 무기한 총파업 돌입한다"

☞ 금속노조, 1월 27일 4시간 파업에 그쳐. 현대·기아차지부 불참.

구조조정, 임금체계 개악 저지!

비정규직·신입사원 우선 공격에 단호하게 맞서야

올해는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자들의 일자리 불안이 증대할 수 있다. 지난해 금융분야에 이어 올해 조선업과 건설업에서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속노조는 올해 사업계획 중 하나로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보장'을 제시했다. 노조는 올 초 △비정규직 우선 해고 반대, △희망퇴직-전환배치 반대, △양보교섭 반대, △확약서 거부 등을 담은 현장대응 지침도 내려 보낸 바 있다.

이 같은 원칙 있는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노조가 비정규직 우선 해고에 반대해 싸우는 것은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도, 종국에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도 의미가 크다.

사용자들의 양보교섭 압박에 단호하게 맞서는 것도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지난해 말 대우조선노조 집행부는 정부의 압박에 밀려 임금 동결, 파업 자제, 생산성 향상 등을 담은 '노조 동의서'를 제출했다. 집행부는 고용 보장을 위한 길이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는 조합원들의 조건을 악화시키고 자신감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종국



이중임금제 폐지를 요구하는 미국 노동자들

에 고용도 지키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중임금제 반대

한편, 사용자들은 지금 우리의 임금을 깎는 데 혈안이 돼 있다. 특히 저들은 연공급제를 허무는 데 관심이 많다. 경총이

올해 임금체계 개악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런데 저들은 한꺼번에 공격을 밀어붙였다가 노조의 저항이 커질까 봐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총은 “새로운 임금체계를 신입 근로자부터 적용하는 방

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현대차 사측은 2013년부터 그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공격이 벌어질 때, 기존 조합원들의 조건 방어를 핑계로 미래 후배들의 임금 삭감에 눈 감아서는 안 된다. 특정 부분에서 시작된 조건 악화를 허용하면 결국 전체 조합원들의 조건이 공격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전미자동차노조 지도부가 신입사원 임금의 절반을 깎는 이중임금제를 수용한 것이 전 공장의 저임금화를 막지 못했던 이유다.

기아차지부에선 2011년 이후 입사한 신입사원 일부가 지난해 '이중임금제 철폐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에 도입된 임금 차별 해소와 앞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이중임금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이중임금제를 저지하며 싸우는 것은 이런 젊은 조합원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이들을 노조 활동으로 끌어들이는 데서도 중요하다. 대의원·활동가들이 앞장서 이중임금제를 막아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임금 저하, 노동강도 강화, 유연화가 없어야 한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문제가 된 오늘날,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대거 늘리는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 한편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장시간 노동에 고통 받는 건 매우 불합리하다.

민주노총의 제안처럼, 적어도 현행법만 지키고 특례조항을 없애도 연간 새로운 일자리 62만 개를 만들 수 있다. 노동시간을 주 48시간으로만 제한해도 새 일자리 1백5만 개를 만들 수 있다.

금속노조가 올해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것처럼, 이 같은 노동시간 단축에서 임금 조건 하락은 결코 없어야 한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잔업·특근에서 자



유로울 수 있어야 하는데, 임금이 삭감된다면 조합원들은 다시 이를 벌충하려고 어쩔 수 없이 장시간 노동을 택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금속노조 사업장들의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에서 임금 보전은 어느 정도 돼 왔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강도다.

2012년에 현대·기아차 사측과 노조 집행부는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생산량을 보전하기로 하고, 그에 상응해 노동강도를 높이는 데 합의했다. 이는 부품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같은 방식의 합의가 이어졌고, 일부에선 외주화가 관철되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강도 강화가 수반된다면, 금속노조가 제시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는 점점 더 멀

어지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사측으로서 노동시간을 줄여도 대대적이 총원 없이도 기존 인력으로 공장이나 사무실을 돌리면 되니까 말이다.

더구나 노동조건 후퇴는 조합원들의 불만을 사 왔다. 지난해 기아차의 8+8 협상 과정에선 노동강도 강화를 포함한 집행부의 양보안이 조합원들의 커다란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따라서 올해 금속노조 사업계획에는 노동시간 단축 시 노동강도 강화가 없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명시될 필요가 있다.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고용유연화(외주화) 없는 3무 원칙을 다시금 움켜쥐어야 한다. 대의원·활동가들이 그간 악화돼 온 3무 원칙을 다시 바로 세우는 데 나서자.



노동자 정치 신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 연대

를 구입하고 정기구독 · 후원해 주세요